



중국 배제
경제블록 추진

홍콩 보안법 제정

제국주의 진영논리 거부하라

관련 기사 2, 4~5면

윤미향·정의연 논란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3면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2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부정

4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5면

경제 침체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8면

서평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6면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혼란시킨다

7면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신뢰하는 국가들과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며, 이 구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개월 전부터 새 경제 블록에 참여하라고 한국에 촉구해 왔음이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급망 재조정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가파르게 악화돼 왔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중국 경제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질서 속에서 성장해 부상했는데, 이제는 이 때문에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중국이 미국의 부를 빼간다고 주장하며 대중국 무역전쟁의 지를 밝혔다.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부분적으로 악화시키는 시도를 해 왔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매겼고, 미국의 중요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예컨대,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공적 연금들이 중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5월 20일 미국 상원은 ‘외국기업책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5월 4일 <로이터>는 미국의 전·현직 정부 고위 관리들을 취재한 후, 코로나19와 경제 추락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생산과 공급 사슬을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게 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서방의 일부 자본가들에게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주는 위험성을 깨닫게 한 듯하다. 중국의 생산이 일시 멈추자 자신들의 공장도 멈췄던 것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우려했다. “중국의 한 성(省)에 외출제한령이 지속되면, 전 세계 공장들에서 급격히 [부품] 재고가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옳음이 입증됐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제약, 의료 기구, 개인 보호 장구 같은 중요한 자원을 다른 나라들에 과잉 의존했음을 보여 줬다.”

이런 맥락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제안한 것이다.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 정부가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적어도 베트남 같은 미국의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미국은 EPA 참가를 한국에 제안했다

우방국으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중국 포위

이미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때문에 서방의 일부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 같은 곳으로 생산 기반을 옮겼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은 그런 경향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물론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다국적 생산네트워크가 쉽사리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기업들에 주는 이익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생산 시설 본국 이전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동원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 속에 ‘탈세계화’ 목소리는 각국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주요 강대국 간 이해 충돌도 더 첨예해지고 서로 위기의 부담을 상대방에 전가하려고 애쓸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처는 그 과정이 블록화 경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미·중 간 지리전략적 대립”이 2020년대를 “더 큰 대불황”의 시대로 만들 여러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으로 환율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있다는 점이 그 한 사례일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5월 25일~26일 이틀 연속 위안화 기준환율을 올렸다.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2월 이후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이다. 중국 경제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려고

환율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리 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 외에도 최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새로운 구상들을 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말이다. 예컨대, 중국의 유라시아 개발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항해, 지난해 11월 미국·일본·호주는 ‘블루 닷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4월 29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5G 업체를 배제한 ‘5G 클린 패스’ 구상도 제안했다.

미국의 이런 시도들은 중국의 강한 반작용과 만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진퇴양난 한국 정부

5월 22일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상당수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쪽을 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미국 국무장관 키스 크라크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경제 번영 네트워크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그 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지 않았다. 키스 크라크의 발언 이후에도 그것이 사실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질수록 큰 딜레마에 빠진다. 삼성전

자 부회장 이재용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하기로 추진하면서, 바로 중국 현지 공장을 찾은 까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세계적 기업인은 그가 처음이었다.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 외에도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5G 동맹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5G 가입자의 30퍼센트가 이용하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등 100여개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한다.

화웨이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의식하면서도 미국과 타협을 모색할 공간이 있다. 키스 크라크가 언급한 바로 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백악관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을 보면,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조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거론됐다.

동남아시아 등지로 시장을 다변화하자는 한국의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부로 연결되고 포섭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중국-인도 국경과 더불어 서해를 중국과의 주요 지정학적 충돌 가능 지점으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을 한국에 즐기치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한국 지배자들은 세계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자체 이해관계(즉, 국익)에 근거해 행동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서 난처해하면서도 한국 지배자들은 여전히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해 왔다. 그 결과는 한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경계하고 위험성을 경고해야 하는 까닭이다.

윤미향·정의연 논란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김승주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들에 대해 분노하면서 앞으로 “꼭 지켜져야 할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 공개”다. 위안부 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투쟁한 지 30년이 되도록 ‘양국[한·일]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들 간 공동행동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매우 고령이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립니다.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제가 사죄를 받아야 위안부 누명을 벗습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또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으면서 현재 생존자는 17명이다.

정대협이 걸어온 길

이용수 할머니가 제시한 다른 하나는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그동안 일궈 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지 끝내자는 것은 아니”라며 우파와 선을 그었다.

우파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일부 표현을 제 눈에 물 대기 식으로 뽑아내 위안부 운동 자체의 대의에 흠집을 내려 한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위안부 운동이 피해자를 팔아 돈벌이만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쏟아냈다.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알려 온 정대협은 주로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찾아서 증언하도록 돕는 등 주류 언론을 통해 사안을 알렸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려면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인권기구에 개입하는 일을 크게 중시했다.

이런 일들에서 정대협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꽤 성과를 거뒀다.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렸고, 영화도 나



오랫동안 수요집회 등에 참여해 온 이용수 할머니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오고,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하원의회, 유럽연합 의회에서 인권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 자신도 한 구실을 했던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무로 돌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성과는 아마도 이런 일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는 동시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도 했다. 실제로 앞서 말한 정대협의 성과들이 국제 여론을 달구기도 했고 일본 정부를 화나게 만들기도 했지만 금세 동력이 사라져 버리곤 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정대협의 개입으로 유엔에서는 계속 위안부 관련 인권결의문이 나왔지만, 1995년 일본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 성금으로 이 문제를 끝내려 했다. 2007년 미 하원과 유럽의회에서 인권결의문이 통과됐고, 한국인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 됐지만, 2015년 기만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미 대통령 오바마와 반기문은 모두 이 합의를 환영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벌인 전쟁 범죄다. 오늘날 일본 국가는 강력한 경제력에 걸맞게 군사력을 강화해 그 때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단지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군사대국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그런 일본을 동맹 삼아, 그리고 한국을 그 하위 파트너 삼아 세계 패권의 경쟁자인 중국(한때는 소련이었다)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정부가 갈등해 안보 동맹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도 이런 질서에 편승해 이익을 거두려 한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추상적인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본주의 강대국 간 군사적 갈등과 그에 따른 세계적 질서) 문제인 것이다. 미국(특히 미국 민주당)과 유엔에 기대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대협의 노선 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정대협은 국내에서는 민주당과 그 정부에 의존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정대협과 여성단체연합의 주요 인물들이 정관계로 진출했다. 5선 의원이었던 이미경 씨나 김대중 정부 초대 여성부장관이자 노무현 정부 총리였던 한명숙 씨, 노무현 정부 여성부 장관 지은희 씨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정부는 피해자들의 기대와 달리 한일 외교 관계를 우선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정대협 출신 정치인들도 그것을 견제하지 못했다. 결국 우파 정부가 들어서 2015년 기만적인 한일위안부합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 말을 바꿨고, 일본이 지급한 위로금 10억 엔(114억 7000만 원)을 관리하는 화해지유재단을 2018년 말에나 느즈막히 해산했다. 돈은 여전히 한국 정부에 있고, 더욱이 그 돈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출됐다. 일본 측은 2015년 합의를 여전히 내세우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 윤미향 씨가 집권당으로 들어간 것이다. 윤미향 씨는 8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때,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며 반대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말도 없이 집권당의 위성정당 후보가 됐으니, 이런 일들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준 좌절감과 당혹감, 상실감을 한 번 역지사지해 봐야 한다.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해서는 안 된다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의 부정 의혹들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다며, 검찰이 수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미향 씨는 ‘잠적’ 상태로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미향 씨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여전히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엔 굴복해서는 안 된다”(당 대표

이해찬)며 방어하고 있다. 불법 의혹 수사를 “신상털기”로 보는 것은 조국 논란 때 많이 봤던 진영논리다.

정의연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정의연 사무실과 서울 마포 ‘평화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의 윤미향·정의연 비판이 일본 극우파에게 빌미를 주고 있어, 운동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진영논리는 위안부 운동의 지속·강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자아낸다.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공안검사 출신 통합당 광상도가 참여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

이번 논란은 우파나 검찰의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위안부 운동 내 주요 인물들이 운동의 방향과 방식을 놓고 벌인 갈등이 출발이었다. 또한 후원금이 대부분인 회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해명도 제대로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지지자들과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진영논리에 기초한 수세적 태도가 아니라 운동이 얻어야 할 교훈을 반 제국주의적·좌파적 관점에서 도출해야, 그래야만 윤미향, 정의연 부정 의혹이 낳을 환멸로부터 운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의미를 윤미향 씨와 정의연의 위법 여부나 자질 문제로 축소하는 것도 본질에서 벗어난다.

더 읽어 보세요

wspaper.org

본지 웹사이트에서
심층 기획 기사와 온라인 토론회
영상을 만나 보세요

기획 기사 목록

- ① 부정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 ③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조계종 ‘나눔의 집’도 부정 의혹

‘나눔의 집’은 경기도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시설로 위안부 피해자 쉽다. 그런데 이 곳에서도 조계종이 막대한 후원금과 보조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터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지출에는 아박하게 굴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한 뒤 고급 요양원을 지어 돈벌이할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일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나눔의 집 부정 의혹은 질타하면서 윤미향 씨와 정의연은 방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중잣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자고 한 이유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연은 기자회견 직후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의 줄임말로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피해자임. [반면]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임.

“정대협이 1990년대 초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용어의 혼용이 존재했음. [그러나] 정대협은 일관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 왔고, 단체 명칭에 포함된 ‘정신대’ 명칭은 역사적 산물에 불과함.”

그러나 이런 답변은 다소 형식적이다. 그보다는 정신대(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다뤄져 온 궤적을 살펴 보면 이용수 할머니의 의중을 좀더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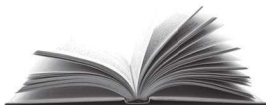
정신대(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모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끔찍한 범죄다. 일본 정부는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최종 승소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19년을 뜨겁게 달군 한일 갈등의 발화점이 됐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근거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본 측이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와 달리 위안부 문제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돼 버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박근혜-아베 정부의 기만적인 한일위안부합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2018년 패소했다. 과거사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말이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항일 투사인 양 행세할 때 느꼈을 커다란 쓸쓸함과 소외감을 짐작할 수 있다.



서평 |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정선영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이나 증권 등을 사 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과 기업들에게 돈을 푸는 정책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세계 각국에서 양극화만 심해졌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옹호론》은 기존의 양적완화라는 “대실험”은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책의 저자 프란시스 코플라는 영국의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일해 왔고, 금융 관련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코플라는 양적완화의 실패 이유가 “중앙은행이 실물 경제를 직접 상대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중앙은행은 단지 은행과 금융 시장만을 상대”하고 “중소기업이나 가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경제에 퍼부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긴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경제에서 빼냈다.” 이 때문에 기업과 은행은 파산을 피했지만, 이들은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물 경제에 투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는 성장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코플라는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통해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 주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평범한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넣어 주거나 정부가 이들에게 돈을 나눠 준다면, 이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다. 생활의 필요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부채를 갚아 소비 여력을 늘릴 것이라고 코플라는 설명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이 통화량 부족 때문이었다며, 위기를 타개할 최후의 수단으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 한다고 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 추진에 앞장선 우파 성향의 통화주의 경제학자로 악명이 높지만, 오늘날 코플라와 같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옹호하며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머니” 주장을 주목한다. 코플라가 책 내용에서 ‘프리드먼’을 거론한 이유다.

둘째는 정부가 직접 공공투자를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세금을 더 걷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리려면 노동계급 운동의 전진이 중요하다 2011년 미국의 ‘점가하라’ 운동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하다. 만약 화폐의 가치가 생산과 별개로 결정된다고 본다면 가치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싸고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왜 이렇게 치열한 계급 투쟁이 벌어져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국가에 돈을 조달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중에 돈을 풀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 10년간 은행을 위한 양적완화가 추진됐지만 인플레이션은 벌어지지 않았다. 코플라는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또 코플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신화는 중앙은행이 민주적 통제를 피하고자 내세우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은행을 위한 양적완화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는 것이다. 코플라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플라의 제안은 분명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경제 위기도 끝낼 수 있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일 테다. 그러나 이 책의 주장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화폐의 본질

코플라의 주장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과 많이 닮아 있다. 현대화폐이론은 화폐의 가치는 결국 국가의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이나 국가의 파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찍어서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묘사하는 것일 뿐 화폐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지는 못하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화폐가 표현하는 가치의 본질은 인간의 노동에서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 따라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자본론》 1권 상, 김수행 옮김, 114쪽)

물론 현대의 화폐는 더는 금이나 은에 기반한 태환화폐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 기반한 불태환화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전체에서 화폐가 표현하는 가치는 실제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총 가치량(즉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의 발권력이라는 것도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가치 생산 과정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금융시장에서 화폐가 공급되는 만큼 생산과 수요(민간소비이든 기업의 투자이든)가 충분히 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하다. 만약 화폐의 가치가 생산과 별개로 결정된다고 본다면 가치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싸고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왜 이렇게 치열한 계급 투쟁이 벌어져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화폐만 공급한다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플라가 자본주의 생산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경제 위기 원인과 대안을 둘러싼 주장의 약점으로도 이어진다. 코플라는 경제 위기가 수요 부족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케인스주의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소비를 부양하고 국가와 기업이 실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화폐 투입이 이뤄지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보면 정부의 지출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 놓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대규모 적자 재정 정책을 펴며 경기를 부양하려 해 왔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0퍼센트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은 저조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투자가 기업들의 이윤율을 높여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

다. 기업의 투자 의욕은 이윤율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투자한 돈 대비 벌어들이는 이윤인 이윤율이 높으면 기업주들은 많은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겠지만 반대면 그러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적 축적 압력으로 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늘어 왔고, 이로 인해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든,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든, 소비와 투자를 보조하는 것으로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위기의 심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 자체를 되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윤율은 2008년 위기 이후 과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 때문에 경제의 장기 침체가 이어져 온 것이다.

현 위기의 원인은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통화 부족도, 코플라 등 케인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수요 부족도 아니다. 이것들이 위기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말이다. 위기는 생산 과정의 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펼치는 일부 정책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동학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노동자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삭감 등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공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코플라는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라는 합리적 정책이 채택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체제의 근본에 존재하는 계급 갈등을 보지 못하는 약점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채택되게 하기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운동이 전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더불어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이나 안정이 아닌 노동계급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체제로의 혁명적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플라 지음, 유승경 옮김.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212쪽, 12,900원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김준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가 그 당의 권력층 후보 조 바이든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5월 13일 바이든은 샌더스와 함께 “통합” 정책(공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 팀이 기후변화 · 보건의료 · 사법 · 경제 · 교육 · 이민 등 6개 부문에서 세부 공약을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의 추천으로 미국 민주사회당(DSA) 당원이자 민주당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기후변화 분과 공동의장에, 전국민 단일건강보험(“메디케어 포 올”) 법안 발의자이자 미국 원주민 출신 하원의원인 프리말리 자야팔이 보건의료 분과 공동의장에 선임됐음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공화당은 바이든이 “사회주의의 기수”가 됐다고 비아냥거렸다.

샌더스는 이런 행보로 “민주당을 전환적 · 진보적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환적 · 진보적” 공약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2020년 샌더스 캠프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자코뱅〉부편집자 데이비드 시로타가 5월 14일에 지적했듯, 민주당은 “기후변화 태스크포스”, “보건의료 태스크포스”를 새로 꾸릴 필요가 없다. 이미 있는 정책인 ‘그린 뉴딜’,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저앉히지만 않으면 된다. … 하지만 바이든이 아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예비경선 당시 바이든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을 “헛된 꿈”이라고 냉소했

고(코로나19 감염이 미국에서 폭증하는 와중에 말이다). ‘그린 뉴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쿡방귀를 뀌었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를 기후변화 팀의 공동의장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보건부장관이었던 비백 머시를 보건의료 팀의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이 팀들의 정책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구실을 할 것이다.

바이든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자본 · 권력층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 활동을 해 왔다. 지난 본지 기사에서 지적했듯, 이런 바이든에 “진보적 강령 [공약]을 이식하겠다는 (헛된) 노력은, 권력층 후보 바이든에 대한 온전한 지지로 서서히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 [바이든은] 그런 강령[공약]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미국 자본주의 수호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샌더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함께 진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해야 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권력층과 별다르지 않은 이 입장이 “전환적 ·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배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캠프 참여는 소속 정당인 DSA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다.

5월 12일 DSA는 전국정치위원회를 열어 “DSA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채택했다. “바이든이 총선 선거운동 당시 반(反)중국 혐오를 적극 수용한 것이나, 바이든에 민



사진 출처: Joe Biden

바이든 지지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악수

을 만든 [성추행] 혐의들이 제기된 것은, 친기업적 민주당이 극우 · 인종차별 · 성차별의 부상을 지지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 주는 우려스런 사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바이든 캠프 합류를 결정했다. 유감스럽게도 DSA는 이에 대해 아직 논쟁하지 않고 있다. ‘한 지붕 여러 가족’인 DSA에서 바이든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던 이전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듯하다.(DSA 내 여러 경향이 그간 민주당 내 활동에 관해 대개 비슷한 전술을 공유해 왔던 것도 봐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지 322호 기사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보시오.)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샌더스, 그리고 미국의 적잖은 진보 활동가들)는 도널드 트럼프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샌더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려면 민주당 권력층과도 동맹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동맹에서 진보파들이 수행하는 정치적 구실은 민주당 권력층에 진보적 외피를 씌워, 대자본 정당

민주당이 노동계급을 대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이 희생되면 계급 투쟁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몇몇 사례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 공산당은 민주당 루스벨트 정부를 지지했다. 그 결과 고양되던 노동자 파업 물결이 좌절을 겪었고, 미국 노동운동은 이후 80년 넘도록 민주당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0~1970년대 흑인 평등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상당수 진보 활동가들이 ‘인종차별 · 전쟁 정당’ 공화당에 맞서 대선에서 거둬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베트남 전쟁을 앞장서 수행했고, 흑인 차별 철폐에 끝까지 주저했던, 공화당과 다를 바 없는 정당이었다. 민주당 지지의 대가는 두 운동 모두 방향을 잃고 민주당 투표 부대로 전락한 것이었다.

2003년 공화당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의 이라크 전쟁에 맞서 반전운동이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닉 클라크

브라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고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내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5월 22일 이후로 브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세계 2위가 됐다.

5월 24일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3만명을 넘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망자 수는 2만 1000명을 넘었다.

브라질의 보건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다. 4월 말에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주(州) 주도 마나우스시 당국은 구덩이를 파 시신을 집단으로 매장했다. 브라질 전역에서 중환자실은 수용 한계에 근접했다.

보우소나루가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려는 시도 일체를 한사코 거부한 데에 따른 재앙적 결과다. 이 때문에 정부의 상층부에서 가뜰이나 심화하던 위기가 더 격해질 수 있다.

브라질의 몇몇 지방정부들이 이동 제한령을 내리자, 보우소나루는 체육

관과 이발소를 “필수” 업무로 지정하는 등 이동 제한령의 효과를 떨어뜨리려 애썼다. 설상가상으로 보우소나루는 이동 제한령 철폐 시위를 부추기고 직접 시위에 참가하기까지 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경제를 평소처럼 운영하는 것이 전염병 대유행 저지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자본가들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권의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보우소나루는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을 강화해 가난한 사람들과 활동가들에게 휘둘렀다.

동시에 보우소나루는 여러 민주적 기구를 폐지하려 들었고, 기업들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브라질을 강타하면서 이미 꼬이기 시작했다.

브라질 경제는 기업주들이 바라는 대로 성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4월 말에 보우소나루의 법무장관 세르지우

모루가 사임했다.

모루는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전 대통령 룰라를 감옥에 가둔 우파 성향 판사였다. [관련 기사 본지 181호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모루의 법무장관 임명은 보우소나루가 내세운 “부패 척결” 공약의 일환이었다.

부패

그런데 모루는 사임하면서, 보우소나루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밀 정보 보고서를 열람하려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모루는 보우소나루가 자기 가족들을 부패 수사에서 보호하려고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청장을 경질하려 했다고 했다. 유출된 내각 회의 영상을 보면 이 혐의는 사실인 듯하다.

5월 23일에 유출된 해당 영상에서 보우소나루는 이렇게 불평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수사 당국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교체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기까지다. 그자들이 내 가족과 친구들을 엿먹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 책임자를 교체할 수 없다면 상급자를 갈아치우고, 그게 안 되면 장관을 갈아치우지 뭐.”

설상가상으로, 4월 말에 보우소나루는 보건부 장관을 경질했다. 보우소나루의 코로나19 대응책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후임자도 한 달도 안 돼 사임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브라질 사회 상층부에서도 보우소나루 퇴진을 바라는 자들이 늘어나는 듯하다.

브라질의 확진자 수가 세계 2위가 된 지 고작 몇 시간 후에 내각 회의 영상이 폭로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 상층부 인사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브라질 경제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뿐이다.

압력을 받은 보우소나루는 주정부의 전염병 확산 저지에 1300억 헤알(한화로 약 28조 8000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그 대가로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 삭

감 등 긴축 조처를 수용해야 한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저항이 일어날 징후가 보인다. 그런 저항이 벌어지면 보우소나루 정권의 위기가 사회 상층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

보건 노동자들이 몇 차례 시위를 벌이고,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빈민들이 파벨라(슬럼)에서 [도심으로] 행진했다는 소식이 있다.

2018년에도 보우소나루 당선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보우소나루는 [임기 동안] 줄곧 저항을 걱정했다. 2020년 3월에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에서도] 이동 제한령을 내리면 2019년 칠레처럼 대규모 시위 등 “사회적 혼란”이 촉발돼 “좌파”가 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저항이 분출한다면 이는 이동 제한령 때문이 아니라 보우소나루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뒤이어 긴축 조처를 쏟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706호 / 번역 김준호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박설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 (5척)을 중국 중동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질렀다.

물론,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아직은 중국을 월등히 앞선다면서 나머지 LNG선 발주 물량은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수주 부진을 면하기는 어렵다. LNG선을 포함해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1.3퍼센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주액도 77퍼센트가 떨어졌다. 이는 '수주 절벽'의 시기로 불리는 2016년보다 34퍼센트나 적은 수준이다.

LNG선의 연내 발주 규모도 연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카타르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지난달 시작됐지만, 유가 급락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발주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감안할 때 하반기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긴축 경영 속에 흔들리는 임금·고용

이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도 2016년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분기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3퍼센트, 수주액은 77.2퍼센트나 줄었다. 수주 잔량도 다시 급감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주에서 건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보릿고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구조조정 공격에 나서고 있다. 임금 삭감, 복지 축소, 전환배치와 외주화 확대 등의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가령,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와 수주 감소에 대응해 "고강도 비상경영"에 착수했다. 경성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줄이는 등 긴축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인사저널>을 통해 타 기업들의 희망퇴직, 순환휴직, 임금 삭감 등을 들먹이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긴축 경영, 구조조정 압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대



“노동자가 무슨 죄내” 5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STX조선 무급휴직 연장 반대 기자회견

재해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긴축 경영 방침 때문에 안전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고, 하청화, 인력 감축, 무리한 작업 속도 등으로 그나마 있는 안전 규칙조차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나 해고 위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수주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하자,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 업체 폐업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하반기에 해양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비정규직 해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잇따른 매각 추진... 일자리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왔다. 정부의 조선업 정책은 2018년 이래 변함이 없다. 대형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을 하되 그중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고, 중형 조선소들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수십만 노동자·가족의 일자리와 삶을 위협할 대우조선 매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EU 등의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또 연기됐지만,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의 추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층 가속화된 세계 경제와 조선업의 위기,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수합병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기도 쉽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중형 조선소 매각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중형 조선소 25곳이 부도·파산해 현재 남아 있는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5곳에서도 인력의 60퍼센트 가까이 줄어든 정도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번에도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고

통이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달 말 각각 한진중공업과 대선조선을 연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

성동조선은 최근 매각이 완료됐는데, 인수자인 HSG 컨소시엄이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수주가 한 척도 없는 상황이라서,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무급휴직이 끝나더라도 공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STX조선의 경험을 보면, 이런 불안감은 실질적이다. STX조선은 2018년에 정부 주도로 노·사·정이 2년간 순환 무급휴직을 합의했는데,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무급휴직 종료가 사측에 의해 가로막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복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자리 책임져라

문재인은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는 뻔뻔한 사기일 뿐이다. 정부는 조선업에서도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한파에 몰아넣고, 사실상 정부 소유의 기업들(대우조선, 중형 조선소들)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몇 곳 남지도 않은 중형 조선소까지 팔아넘기려는 정부를 보며, 노동자들이 “과연 중형 조선소를 살릴 의지나 있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산업 정책에 개입하거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이 못 된다. 지난 4월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 지도자들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

지와 노동 보호”를 위한 조선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불황기에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한국 자본주의, 조선업을 살리려면 노동자들도 희생과 양보를 감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종식 창원대 연구원은 중형 조선소 경쟁력을 위해 업체 통합(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가 중형 조선소를 인수합병해,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바리 조선의 인수합병은 결코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 연구보고서는 이마바리 조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로 적극적인 외주 인력 활용, 저렴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꼽았다. 타사보다 외주 하청인력 비율이 50퍼센트가량 높고, 인건비가 20퍼센트 낮다는 것이다.

물론 토론회 발표자는 한국 조선업의 현 인력·설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서면,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장해제 되기 쉬울 수 있다.

사회적 대화도 결코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18년 성동·STX조선에서 추진된 사회적 합의는 그 위험성을 잘 보여 준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그 합의를 두고, 노조가 임금과 복지를 양보하고 기업은 해고 대신 무급휴직이나 전환배치를 추진한 “친고용 구조

조정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수년간의 무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용률을 추락시키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인위적 해고” 대신 무급휴직, 순환휴직, 전환배치,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항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게 일자리 보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도·파산 기업의 경우 정부가 그 기업을 매각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인수·운영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동자 저항이 구축돼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